南北→韓美→4자 '릴레이 정상회담'

■ 노대통령 임기말 '외교 드라이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위한 이벤트 일회성 아닌 미래진행형으로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의 반환점을 돈 상태이지만 한반도 안보와 평화라는 화두와 씨름하며 그 어느 해보다도 '뜨거운 늦여름'을 보낼 전망이다.

오는 28~3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메가톤급 이벤트'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9, 10월까지 한반도 외교안보지형을 새로 쓸 수 있는 일련의 정상외교 일정이 줄줄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제 1차 남북정상회담때와는 달리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가 진행중이고, 관련 당사자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회담에 추동력이 실리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 6월말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해결을 계기로 6자회담이 재가동되면서 북핵논의가 비핵화 2단계 조치인 불능화 논의로 접어들었고, 2·13 합의에 입각한 워킹그룹회의가 개최되는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창조적인 노력들이 집약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정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단지 '8월 28일~30일 평양'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만 시선을 머물게 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단계로 논의를 한단계 레벨업시키는 '미래진행형' 회담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노 대통령은 9월초 시드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9월말 유엔총회를 무대로 한 다자 정상외교, 그리고 9월말~10월초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 등 굵직굵직한 정상외교 일정들을 진행한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이들 정상외교의 끝자락에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대미'를 장식할 수도 있어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4자 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의 다음 프로그램이 아니라,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풀려간다면 그것이 필요할 때 그 때가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임기말의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이다. 한미정상회담의 경우 지난달 2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 대통령의 '올해 가을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함으로써 가시화됐다. 시점은 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9월말~10월초에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올들어 "임기말까지 국정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수 차례 다짐했던 노 대통령의 의지가 정상외교분야에서도 실천되고 있는 셈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출발로 이어지는 연쇄 정상외교에 임하는 노 대통령의 자세와 구상은 오는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큰 틀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상외교의 길 오는 28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 등 장·차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력공급 '경수로' 최대 관심

남북경협, 교통·자원·공단 문제 초점

오는 2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 분야 의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경협 의제가 어떻게 결정될지 불투명하지만 그간 남북이 꾸준히 이 문제를 논의해왔기 때문에 대강의 그림은 그릴 수 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북한의 전력 문제 = 북한 경제는 전력과 유류 등 동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생산이 위축되고 이는 소비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당시 경수로가 '당근'으로 주어졌으며 남측도 핵 폐기를 조건으로 2년 전 200만kW규모의 대북송전 제안을 했었다.

어떤 방식으로 전력 협력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북측은 경수로에 집착하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6자 회담에서도 "영변 핵시설이 해체 국면에 들어가면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북한의 전력 설비용량이 노후화하기는 했지만 설비용량이 북한의 경제수준 상 부족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발전 및 송·배전 설비의 개선 방식, 또는 정부가 2년 전 제안했던 200만kW 규모의 송전방식 전력 공급도 충분히 고려 가능한 사안이다.

◇자원 개발-인프라 연계 가능성 = 또 하나의 의제 대상은 자원개발이다. 북측의 풍부한 각종 광물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남측의 산업에 이용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 '윈-윈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북한의 교통 인프라 주축인 철도의 경우 지난 5월 경의선 개성역-문산역 구간, 동해선 금강산역-제진역 구간이 연결되면서 남북 간 철도의 정기운행 인프라가 갖춰졌지만 아직까지 정기운행을 위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간 정기운행이 성사되면 막대한 물류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향후 러시아 횡단철도(TSR)나 중국 횡단철도(TCR) 등 대륙철도와 연결을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개성공단 활성화 = 개성공단 사업도 중대 사안이다. 일각에서 제2개성공단 조성문제가 나오지만 원래 계획이 2천640만㎡를 개발한다는 것이었던 개성공단만 해도 이제 1단계 330만㎡ 사업만 끝난 상태인 데다 이곳에 근무할 북측 인력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문제다. 공단 입주 기업들은 우선 남한과의 손쉬운 통신과 출입 간소화 등을 해결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필요"

서울대 통일연구소 조사

국민 10명 중 7명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9일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8%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도 33.2%나 됐다.

이 조사는 남북정상회담 발표 이전에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호남(83.2%), 강원(77.8%), 인천·경기(66.8%)지역의 경우 시급성을 느끼는 응답자가 많았지만 제주(53.8%), 대구·경북(61.4%), 부산·울산·경남(62.8%) 지역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또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0.2%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는 21.8%에 그쳤다.

'북한의 일련의 대남정책이 올 12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3%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46.8%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기적 남북 당국 간 회담'이 통일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4.7%가 '그렇다'고 응답해 인도적 대북지원(57.4%), 사회문화 교류(69.7%), 남북경제협력(72.5%) 등 다른 요소가 통일 기여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1 : 1 개별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이뤄졌으며 신뢰수준은 95%(표본오차 ±2.8%)라고 통일연구소는 밝혔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열차 방북 이뤄질까

하늘길 보다 효과 높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 방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일 노 대통령이 경의선 열차를 통해 방북하면 항공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남북 열차개통 협상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주 개성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준비 실무접촉에서 이 같은 방안을 북한에 제안할 계획이다.

북측의 수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 하지만 그간 철도는 아니지만 도로를 통한 방북이 자주 있어왔다는 점은 열차 방북 가능성을 높여준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도 육로가 이용됐고 이달 초 김만복 국정원장의 극비 평양 방문도 개성공단을 거쳐 육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방북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주 주지사 일행도 육로를 이용해 판문점을 지나 귀환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미 육로로 오고 간 사실이 있으니 우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하지만,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우선 북측은 지금까지 동해선 남측구간의 완성을 요구하며 열차 완전개통을 미루고 있다. 또한, 항공편보다는 주민들이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육로를 통해 대규모 방북단이 움직이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북측이 안전이나 경호상의 문제를 들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는 항공편을 이용하고 나머지 수행원과 취재진은 열차를 통해 육로로 이동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연합뉴스